

“지속가능한 적극재정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 시현”

- 기획예산처, 정부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 -

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·경기회복 뒷받침

- 재정의 적기대응('25년 2차 추경)으로 정부출범 직후 성장률 반등('25.상 0.3→'25.하 1.7%). '26년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(29일, 과거평균 70일)

②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

- '26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(△27.3조원)의 지출구조조정 단행,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, '25년 역대 최대 건수(992건)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

③ 국민참여·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

-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2배 이상 확대('25 517→'26 1,091건),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 3배('25 3.5→'26 10.6조원) 확대 등

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'26.5.20일(수) 14:00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'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'를 보고하였다. 금일 보고한 핵심성과는 다음과 같다.

[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·경기회복 뒷받침]

기획예산처는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였다. 정부출범 직후인 '25.7월 편성된 새정부 첫 번째 추경은 4분기 연속 0%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,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(15~55만원)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1.8조원을 집중 투자하였다. 그 결과 '2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반등('25.상 0.3% → '25.하 1.7%)에 기여하였다. 특히,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

기여도(전년동기비)가 '25년 상반기 0.3%p에서 '25년 하반기 0.9%p로 3배 수준 상승하는 등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**민간소비를 크게 진작**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. 또한,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.2조원 규모의 **전쟁추경('26.4월)**은 **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**(과거20년 평균 70일)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였다.

'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**총지출 규모를 8.1%로 대폭 확대**(^{'24} 2.8 → ^{'25} 2.5 → ^{'26} 8.1%)하였다. 특히 지방거점성장(+10.3조원, +54.2%), AI 대전환(+6.6조원, +200.0%), 에너지 전환(+1.9조원, +31.7%)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, **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**하였다.

[②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]

기획예산처는 '26년 역대 최대규모인 **△27.3조원**(^{'22}△12.8 → ^{'24}△22.7 → ^{'26}△27.3조원)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. 저성과·비효율·낭비성 예산을 일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.7만개의 25% 수준인 **4,400여개의 사업을 감액**하였으며, 전년도의 6배 이상인 **1,300여개의 사업을 폐지**하였다.

또한,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, **관계부처 합동, 외부전문가 중심의 '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'**를 도입하였다. 이를 통해, **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을 제고**하고 **재정운용에 대한 환류**를 강화하였다. '26년 첫 번째 평가결과('26.1~5월)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**감액·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.3%**(901개 사업)로 **역대 최고수준**을 기록하였다. 이는 최근 5년간 **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(15.8%)의 2배가 넘는 수준**이며, 평가결과는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'27년도 **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**(감액사업 15% 이상, 폐지사업 전액 삭감)될 예정이다.

한편, 재정운용 과정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**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**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. '25년 합동 현장점검, 부처 자체점검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(e-나라도움)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(10,780건)을 기반으로 **역대 최대 건수의 부정수급**(^{'24} 630건·493억원 → ^{'25} 992건·668억원)을 **적발**하였다. 또한 “예방, 빈틈없는 적발, 타협없는 후속조치”를 목표로 「**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**」을 발표('26.3월)하여 현장점검을 '25년 대비 20배 이상 확대(606→13,200건+α),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, 제재·신고포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.

[③ 국민참여·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]

기획예산처는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 외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포함시키고,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 이상 확대(300→600명)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('25.12월)하였다. 또한, 지출 구조조정 내역 최초공개('25.8월),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('25.12월, 206→242종)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하였다.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나고('25 517 → '26 1,091건),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수가 30% 이상 증가('24 39 → '25 51만명)하였다. 또한 재정당국이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최초로 개최('26.4월, '26.5월)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.

또한,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였다. 아동수당, 노인일자리,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,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하여 수혜자 지원금 인상, 사업물량 추가 배분, 자부담율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 하였다. 그 결과 '26년 아동수당은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에 대해 0.7조원이 추가 지급 되었다.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3배 이상 확대('25 3.5 → '26 10.6조원)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였고, 예타·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△5%p 축소하고, 지역균형 가중치는 +5%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·강화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.

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소관 국정과제(재정운용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 등)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,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류승수 (044-214-1410)
		담당자	서기관 이홍섭 (leehs86@korea.kr)
			사무관 김나현 (nahyun5959@korea.kr)
			사무관 박제용 (jypark0601@korea.kr)